경기도, 소·부·장 기술독립 96억 지원

〈소재·부품·장비〉

64개 내외 기술개발 과제 지원
1개 과제 당 최대 1억5000만원
"도내 기업 국산화 위해 총력"

경기도가 일본 수출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올해 총 96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오는 30일까지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독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현재 국산화 및 수입 대체재 개발이 필요한 전 산업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다.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재·부품 국산화 45개 내외, ▲장비 국산화 19개 내외 등 총 64개 내외의 기술개발(R&D)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 과제 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성남시 소재)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수출규제 동향과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취지, 중앙정부 R&D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 신청 없이 도내 기업·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도내 기업의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 R&D에 집중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도내 기업 국산화 및 수입 대체재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도의 대표 R&D 사업이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11년간 750개 과제에 1303억 원을 지원해 매출 5282억 원, 비용절감 138억 원 등 투자대비 5.8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의정부(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서울시, 의료관광 집중… '越 호치민' 공략

越 지난해 의료관광객 7532명 방문
일대일 상담회·교류 활성화 방안논의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영등포구, 8개 민간 의료기관·유치기관과 8일 베트남 현지에서 서울 의료관광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한국 방문 의료관광객이 총 7532명(의료관광객 방문객 수 8위)을 기록할 정도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다.

행사 개최지인 호치민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베트남 평균 대비 2배가 넘는 경제 중심 도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현지 의료 기관, 의료관광 에이전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 의료관광 인프라와 현황을 소개한다.

국내 병원의 의료관광 상품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의료관광 설명회 참가기관은 ▲김안과병원 ▲닥터안헤어플란트의원 ▲루비성형외과 ▲르미엘성형외과 ▲바노바기성형외과 ▲(주)나이스메디 ▲메디컬코리아서비스 ▲EMS 등이다.

시는 관광설명회에 참가한 기업과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일대일 상담회도 실시한다. 서울을 방문하는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호치민시 관광국을 방문해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을 소개하고 양 도시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서울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서울 인지도 향상 및 의료관광객 방문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9호선 파업 현실로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13개역)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조가 인력 충원과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11~12일 무형문화축제 '한마당'

한국 무용·판소리·줄타기 등 공연

서울시는 11~12일 남산골한옥마을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서울무형문화축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조선시대 최대 연희행사인 산대나례 행진으로 시작한다. 식전 행사로 남사당놀이로 흥을 돋운다. 마을 굿인 남이장군 사당제로 행사의 안녕을 기원한다.

한국 무용, 판소리, 줄타기, 솟대놀이, 송파다리밟기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시민들은 전통주 시음, 한과 만들기, 떡 메치기, 활쏘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19 서울무형문화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5호 한량무. /서울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무형문화축제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전통을 신명 나게 즐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통의 가치를 꿋꿋이 지켜가고 있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따릉이 '무단사용 급증'… "실시간 위치추적"

서울시 이용객 증가로 무단 사용↑
자전거에 도난방지 기능 추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무단 이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따릉이 수가 2015년 2100대에서 올해 2만5000대로 1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서비스 이용 건수는 6만 9474건으로 역대 9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무단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이 따릉이 사용 후 거치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파손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이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따릉이를 제대로 거치하지 않을 경우 5분당 200원의 초과 요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강제 회원 탈퇴나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방치된 따릉이 회수를 위한 전담반은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11월부터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일부 청소년 사이에 영웅놀이처럼 퍼지는 따릉이 무단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 계도·교육 요청을 하기로 했다.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경찰서에 의뢰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달 3일 기준 56건의 따릉이 무단 사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따릉이 무단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전거에 도난방지기능을 추가한다. 이달부터 무단 이용 시 단말기에서 경보음이 울린다.

신형 따릉이에 QR단말기를 도입한다.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을 추가하고 잠금장치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기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따릉이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민의 공공재산"이라며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의류 불법 라벨갈이 일당 검거… 19명 입건

서울시 두 달간 특별 단속 491점 압수

중국산, 도미니카산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바꿔치기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지난 두 달간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491점을 압수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국외 생산 의류를 들여와 국내산(Made in Korea)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불법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봉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소비자와 업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불법 라벨갈이 행위를 많이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종로구·중구·성북구와 합동 심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라벨갈이 작업을 한 의류, 'MADE IN KOREA'(한국산) 표시 라벨이 붙어 있다. /서울시

관세청과 공조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수입·판매내역을 분석, 구체적인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뿌리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률 83%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률이 83.38%로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도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지난달 30일 마감한 결과 지급 대상자 14만 8808명 가운데 12만4074명이 신청했다.

올해 첫 신청을 받은 지난 1분기 신청률은 82.93%, 2분기는 84.24%였다.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구리시가 89.64%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광명(89.26%), 동두천(88.61%), 성남(88.06%)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 화폐(전자 카드, 모바일 등)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수원(경기)=김승열 기자